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447
----------	------

발의연월일 : 2025. 1. 10.

발 의 자 : 김준혁 · 김문수 · 이수진
이훈기 · 염태영 · 김동아
강유정 · 백혜련 · 김승원
부승찬 · 김용만 · 김영진
문정복 · 정을호 · 윤종오
안규백 · 김영호 · 고민정
박수현 · 권칠승 · 박지원
용혜인 · 박희승 · 김재원
이연희 · 차규근 · 정혜경
채현일 · 박해철 · 이해민
전종덕 · 한창민 · 이기현
의원(33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 탄광(長生炭鑛)에서 수몰 사고가 일어나 강제동원된 조선인 136명을 포함한 183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 역사적 비극을 깊이 애도하고 이 사고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시민단체, 희생자 유족, 각국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다

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장생 탄광 수몰 사고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과 인권침해의 결과로 발생한 비극임을 인정하고, 사고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사고 이후 83년이 지나도록 해저 갯도에 방치되어있는 희생자들의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갯도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유해발굴 작업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상호협력하여 이 사고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작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UN)과 유네스코(UNESCO)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장생 탄광 수몰 사고를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 사고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을 요청한다.

제안이유

장생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동부, 토코나미 해안에 위치하였던 해저 탄광으로, 위험한 해저 갱도 작업을 일본인 노동자들이 기피하여 주로 조선인 노동자에게 맡기었음. 이로 인해 속칭 ‘조선 탄광’으로 불리며 수몰 사고 직전까지 약 1,000여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이 이곳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음.

1942년 2월 3일 오전 6시경, 해안 갱구에서 1,100m 떨어진 갱도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해저 갱도의 천장이 무너졌고, 오전 8시경 갱도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생매장되는 참사가 일어남. 이날 사고로 인한 사망자 183명 중 136명이 조선인 노동자였음. 사고 직후 일본 측은 2차 사고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갱구(坑口)를 폐쇄하였고 희생자들의 유해는 단 한 구도 수습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도 차가운 바닷물 속에 남아있음.

한편, 장생 탄광은 1990년대까지 갱구와 탄광 유구(豎坑)가 남아있었으나 그 후 유구가 철거되고 갱구 위치도 알 수 없게 되었음. 현재 장생 탄광이 존재하였다는 유일한 증거로 원형 콘크리트 배기통 2개만이 남아있음.

사고 이후 장생 탄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듯했으나 최근 일본 시민단체 ‘장생 탄광 물비상(水非常)을 역사에 새기는 회’를 비롯한 희생자 유가족들의 노력으로 탄광의 갱구가 발견되었고 잠수부를 투입하여 갱도 내부를 일부 조사하는 등 탄광 발굴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

고 있음. 다만 유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갯도 심층부(300m)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여 아직 유해는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며 해당 시민단체는 올해 1월 말부터 사흘간 추가 잠수 조사를 벌일 계획에 있음.

이렇듯 일본 시민단체는 적극적으로 유해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해저 갯도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가에 의한 조사 실시나 민간조사에 대한 협력을 현시점에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임.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과거의 비극적 역사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장생 탄광 수몰 사고의 진상규명과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대한민국 정부도 당사국으로서 일본 정부와 상호협력하여 사고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작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장생 탄광 수몰 사건을 국제사회가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유해발굴 및 봉환작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희생자들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장생 탄광 수몰 사고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

력 축구」를 결의함.